

지난 1월 발의된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영화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법안이 규정하는 ‘인격표지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정의와 한계를 살피고, 법안이 실제 적용됐을 때 영화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점검해보았다.

글 | 양영철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인격표지권’을 아십니까?



인격표지권이란 지금까지 흔히 사용돼온 용어인 ‘퍼블리시티권’의 동의어로 ‘사람의 성명, 초상, 목소리 등 그 사람의 특징적인 요소가 나타나 있는 것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2조에 따르면 인격표지권자는 ‘인격표지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이므로 그것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인격표지권은 성립되지 않고,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격표지권은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권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프라이버시권은 우리 헌법 제10조와 제17조 등이 보장하는 높은 수준의 가치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적 속성의 비공개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권리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정신적 영역이기 때문에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며, 이를 침해당했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그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이와 달리 인격표지권은 헌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로서 인격적 속성의 상업적 사용이 목표인 일종의 재산권에 머무르는 대신,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거나 양도 혹은 상속할 수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상품화할 수도 있다.

총 23조로 구성된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제6조에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인격표지의 이용 매체들이 예시돼 있는데 ①광고, 포스터, 입간판 ②공중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③정기간행물, 허락받지 않은 전기물 ④사진 ⑤영화, 드라마, 연극 ⑥음악 ⑦미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7조에 의해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인격표지권은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지만, 각 구성원은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인격표지권은 인격표지권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30년간 존속하며(8조) 인격표지권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상속되고 유언에 의해 특정인에게 증여할 수 있다(9조).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10조) 다른 사람에게 그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11조).

인격표지권의 제한에 대한 규정도 있다. ①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광고의 목적이 없이 시사 보도를 하는 경우 ②적법하게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경우 ③오로지 공중의 일원으로서만

촬영된 사진으로서 특정인의 이름이나 동일성이 연관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격표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15조). 또 널리 알려진 인격표지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정성의 판단을 위해서 ①이용 목적과 성격 ②이용의 본질 ③이용된 양과 질 ④이용의 경제적 효과 등의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16조). 인격표지권자는 권리가 침해됐을 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17조),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인격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도 포함된다(20조).

인격표지권, 무엇을 놓치고 있나?

영화는 예술과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비교적 자유롭게 실존 인물을 소재로 삼아왔고, 종종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해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문법이 제정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이 법이 비록 인격표지의 상업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이 예술과 표현에 대응하고 우위를 점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어떤 영화로 인해 개인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었지만, 실정법상 명문화된 조항으로 보호받게 되면 별도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화라면 제16조가 규정한 공정한 관행에 의한 이용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인격표지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제17조에 의해 제작 중지 혹은 상영 중지 가처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리자나 상속자를 찾을 수 없어서 허락 없이 영화를 만들었다가 만약 뒤늦게 이들이 나타나 청구하면 법원의 상영 중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인데, 대규모 제작비 투입과 광역 배급 방식이 정착된 지금의 영화산업계 입장에서 이는 가장 두려워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제작 예산이 충분한 블록버스터의 경우라면 인격표지 이용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제작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에 의해 대가 지불의 관행이 정착되고 나면 저예산영화는 설 땅을 잃을 가능성마저 있다. 또 촬영 현장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저예산영화의 경우, 화면에 공중의 일원으로 불특정한 인물들이 촬영되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다. 공중의 촬영에 있어서 영화와 사진을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법안 제15조 3항의 수정을 통해 사진뿐만 아니라 영화에 대한 예외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존 인물을 표현한 영화가 이 법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상해보자. 극영화의 경우라면 인물의 초상과 목소리 등은 출연 배우의 것이므로 이들과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화속 실존 인물의 인격표지 중 유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성명인데, 그것을 자막 처리하거나 혹은 상대 배역의 대사를 통해 노출할 경우 당연히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실존 인물의 성명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가명을 사용한다 해도 관객은 배우의 연기와 스토리 흐름 속에서 특정 인물이 표현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 법안은 인격표지를 ‘인물의 특징적 요소가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모호하게 정의하는데, 향후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그 특징적인 요소가 배우의 모사 연기를 통해 발현되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제한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인물의 인격표지를 직접 화면에 담는 것이 불가피한 다큐멘터리영화는 거의 모두가 이 법의 대상이 된다. 인격표지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채 제작을 시도하려면 가명을 사용해야 하고 목소리는 변조해야 하며 초상을 모아 이크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더라도 인물의 특징적 요소를 모두 가릴 수는 없다. 화면에 등장하는 이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영화는 위법한 영화가 돼버리는데, 그렇다면 영화에 비판적 내용을 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제15조 인격표지권적용 예외 조항에 ‘현실에 기초한 다큐멘터리로서 영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영화계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법안이 인격표지의 이용 매체로 영화를 명시하고, 인격표지권 적용 제외 항목에서 영화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영화는 각종 광고물이나 소비 목적의 제품들과 달리, 복합적 성격의 문화상품으로서 표현성과 상품성을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층위의 영화가 존재하지만 예술영화와 상업영화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자체가 예술의 영역이어서 입법부나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지는 영화가 사전에 인격표지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떤 영화라도 예술적 표현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못해 제작에 착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법안은 초두에서 ‘최근 연예인 및 스포츠인 등의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산업이 등장하였으므로 (...) 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개인의 권리 보호 및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제안 이유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격표지권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3조). 인격표지권의 명시적 보호를 넘어서서 산업적 발전을 통해 한류스타의 인격표지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육성을 위한 이러한 노력이 기존의 콘텐츠산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그 이해



〈변호인〉

득실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 입법에 대한 제언

지난해 11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또 다른 입법 주장은 인격표지권의 강력 보호가 아닌 안정화가 핵심이라는 것이었다. 성형외과를 비롯한 소규모 기업들이 유명인의 서명이나 초상을 허락 없이 사용해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명시적인 대법원의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하급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관련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실정법의 부재를 이유로 인격표지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다수 나오고 있는데,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재판부가 ‘성문법 국가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법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겠지만, 아직 해외에서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성문법 제정이 확고한 추세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굳이 단행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지나치게 자세한 규정을 두기보다는 법적 안정성은 확보되되, 사법부가 개별 매체의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는 결정을 하도록 여지를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제6조 인격표지 이용 예시 조항을 삭제하거나, 혹은 이를 수정해 ‘①광고, 포스터, 입간판 ②공중의 소비를 목표로 하는 제품 ③이외에 영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매체’ 정도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해본다. 같은 맥락에서 제15조 1항이 신문과 방송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법부가 제16조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신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번에는 인격표지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의 법제정을 추진하고 추후 미비한 사항들은 개정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영화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에 관해 영화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소수의견〉을 연출한 김성제 감독은 “기본적으로 인격표지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해당 법안은 오용이나 악용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다큐멘터리영화뿐만 아니라 극영화에서도 창작자의 상상력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김성제 감독은 〈소수의견〉이 특정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으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만약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출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소수의견〉을 보고, 특정 단체나 특정 사건에 관계돼 있는 자가 본인의 인격표지권을 침해당했다며 영화 상영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창작자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장받아 마땅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한 그는 “물론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을 표현하고자 할 때 허락을 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현실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건이나 현실에 있는 인물을 비슷하게 묘사했다는 이유로 인격표지권 분쟁이 촉발된다면, 연출자뿐 아니라 영화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인격표지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의 최정화 PD 역시 “동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영화계에는 수많은 고소·고발과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며 “영화계에서는 아직 인격표지권과 관련한 구체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해의 적용 범위에 영화를 포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근거가 생기면 이를 활용할 사람들은 결국 나타나게 돼 있고, 이것이 빈번해진다면 결과적으로 창작자와 투자자 단위에서 스스로 검열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제작사 파이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법무법인(유)원의 변호사인 조광희 대표는 “동 법률안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까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판례가 일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인격표지권’이란 용어를 사용해 성문화하고, 관련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

글 | 김선미

기준들을 정립해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려는 입법적 노력의 차원에서 바라볼 것을 권했다. 즉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정하려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1월 발의된 동 법안의 초안에는 해석 여하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

문에 이와 같은 부분만 수정된다면 영화인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변호인〉 〈카트〉 〈소수의견〉 등과 같은 영화의 공통점은 사전 정보가 전혀 없이 관람하더라도 영화를 본 후 관객이 특정 사건이나 단체, 혹은 특정 인물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 영화가 실제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토대로 제작된 극영화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관객들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나 이랜드 파업, 용산 참사 등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영화라는 매체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연적이다. 여기에서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나 창작자가 의도적으로 실화를 떠올리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비슷해진 것인지의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보다 그럴듯하고 현실에 있음직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모든 영화는 지금의 현실, 우리 사회를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간 영화계에서는 실화나 실존 인물을 토대로 영화를 제작했다고 밝힌 몇몇 영화 창작인과 관련 당사자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있어 왔다. 대부분은 명예훼손에 관한 것인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판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영화 창작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인격표지권’과 관련한 동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명예훼손 외에도 영화를 둘러싼 다른 범주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분명 이는 영화계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일일 것이다. 물론 동 법안의 목적은 몇몇 영화인의 우려처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을 시작점으로 삼는 영화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인격표지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한, 영화인들의 우려가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인격표지의 이용 매체로서 영화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살피는 것을 첫걸음으로, 영화계가 해당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는 까닭이다. 🍿